

2022. 6. 24.(금) 13:30~15:30.

수원시흥재복지타운 4층, 교육실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수원시 여성가족 정책 토론회



신청하기

좌 장 : 조미옥 (수원시의회 의원)

발 표 : 박재규 (수원시여성문화공간 휴 센터장 / 여성가족분과 분과장)

토론 - 김혜금 (동남보건대학교 교수)

- 최윤선 (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실장)

-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김성미경 (한국여성인권플러스 대표)

주관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가족분과

— ○ — 목 차

 여성가족정책 토론회 개요	1
[주제발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과제 발굴 및 민선8기 성평등정책 제안	5
박재규 (여성가족분과장 / 수원시여성문화공간휴센터장)	
[토론 1]	
[노동, 소득] 제안 과제에 대한 토론	33
최윤선 (가톨릭대학교 연구교수)	
[토론 2]	
성평등정책 제안에 대한 토론	36
김혜금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교수)	
[토론 3]	
성평등정책 제안에 대한 토론, 폭력안전 토론문	40
김성미경 ((사)한국여성인권플러스 대표)	
[토론 4]	
추진체계 및 젠더 거버넌스 토론문	44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여성가족 정책 토론회

☞ 토론회 목적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 35조~ 36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민관협력과 시민참여를 통해 수립하는 4년 단위 계획임.
- 수원시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2026년까지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임.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가족분과에서는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젠더거버넌스·추진체계 / 돌봄·젠더의식 / 노동·소득 / 폭력·안전 4개 정책영역별 TF를 구성하여 논의하였으며, 수원시에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제안하고자 함.
- 수원시민, 여성가족 관련 단체·시설·기관 및 확장된 전문가 논의를 위해 여성가족 정책 토론회를 개최함.

☞ 토론회 개요

- 주제 :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여성가족 정책 토론회**
- 일시 : 2022. 6. 24.(금) 13:30 ~ 15:30
- 장소 : 수원시흥재복지타운 4층 교육장
- 참여 : 여성가족 단체·시설·기관 관계자, 수원시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 내용
 - 좌장 : 조미옥 (수원시의회 의원)
 - 발표 : 박재규 (수원시여성문화공간 휴 센터장 / 여성가족분과 분과장)
 - 토론 - [노동, 소득] 최윤선 (가톨릭대학교 연구교수)
- [돌봄, 젠더의식] 김혜금 (동남보건대학교 교수)
- [폭력, 안전] 김성미경 (한국여성인권플러스 대표)
- [젠더거버넌스, 추진체계]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주관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가족분과

[주제발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과제 발굴
및 민선8기 성평등정책 제안**

박 재 규

여성가족분과장/
수원시여성문화공간휴센터장



제5기 수원특례시 지역사회보장계획 과제 발굴 및 민선8기 성평등정책 제안

수원특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가족분과

1. 문제제기

2022년 2023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수원시가 그 동안의 숙원사업인 ‘수원특례시’로 승격되었으며, 6.1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8기 시정이 새롭게 출발하는 원년이기도 하다.

지난 4년 동안 여성가족분과에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에 반영된 10개 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별 추진과정 및 성과 등을 검토하여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여성가족분과 사업을 소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여성가족분과 사업(2019~2022)

일련 번호	사업명	내 용
1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제정, 실태조사,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등
2	일생활 균형 지원 및 기능강화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및 여성고용 유지 교육(워킹맘 워킹대디 사업)
3	수원시 가족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	수원시 양성평등기본계획에 포함 추진하였음(2020)
4	학교기반 폭력예방교육 개선 및 확대	대규모 강의를 탈피하여 반 중심의 소규모 교육 추진
5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감정노동자 상담, 근로환경개선교육
6	수원시민 성인지 정책 이해 교육	강사양성(2019), 강사파견 교육 진행
7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교육안 개발, 부모교육 추진
8	고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리자 대상 성인지 교육 강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리자 성인지 이해 증진 교육 추진
9	여성안심안전 사업	무인택배함,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우먼하우스방법서비스 등 지속 추진
10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자녀 대상 교복 및 교육비 등 지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각 분과에서 발굴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담당이 예상되는 수원시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사업보다 이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채택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분과에서는 “성평등정책관”을 중심으로 하는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부결되어 삭제되었다. 이처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된 여성가족전략 사업은 수원시의 성평등정책의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반영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사업예산 규모는 소규모 수준이며 더욱이 지역사회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파급력도 갖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처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여성가족전략 사업들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출발하였으나 분과 위원들의 성실한 분과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 제안, 그리고 사업 담당 직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열린 마음으로 제안 수용 등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특히 여성가족분과는 지난 4년 동안 3번에 걸쳐 ‘우수 분과’로 선정되어 포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러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이전과 다르게 분과별 사업 발굴 추진보다 전략적이고 총체적인 차원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분과 차원에서 과제 발굴되어 채택하기보다 각 분과에서 과제를 발굴한 것으로 모아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전체 전략 차원에서 과제가 선택되어 반영될 수 있다. 더욱이 민선 8기 시정이 7월 1일 출발에 앞서 인수위원회에서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여성가족분과로서는 새롭게 출범하게 될 민선 8기 시정에 성평등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성과 포괄성을 갖는 과제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 발굴을 위해 여성가족분과는 2020년부터 분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수원형 성평등지수’의 틀에 맞추어 진행하였다. 즉 수원형 성평등지수는 최근 새롭게 개편되고 있는 지역성평등지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성평등 수준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표까지 포함하여 구성하였고, 현재 생산되지 않은 지표의 경우 향후 생산을 목표로 추가하였다(수원형 성평등지수는 2021년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가족분과 토론회 자료집 참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기존 방식과 다르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성가족분과는 변경된 양식에 맞추어 여성가족정책 과제가 다수 반영될 수 있도록 비중 있는 과제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민선 8기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여성가족정책 반영을 제안하기 위한 차원으로 진행하였다. 여성가족분과에서 제안한 정책 발굴 과제는 <표 2>와 같다.

<표 2> 여성가족분과 발굴 여성가족정책 제안 내용

영역	사업명
추진체계 및 젠더 거버넌스	①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통합체계 마련
	② 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강화
	③ 수원시의회 성평등 수준 제고 방안
	④ 수원형 성평등지수 관리체계 구축
분배 (노동, 소득, 교육, 건강)	⑤ 수원형 경력이음 및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수립
인식 (돌봄, 젠더의식)	⑥ 수원특례시 돌봄공공성 확대_돌봄플러스센터(가제) 설치
	⑦ 수원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⑧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예비부모교육)
폭력과 안전	⑨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⑩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⑪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확보
	⑫ 인식개선 활동 활성화

여성가족분과에서 제안하는 여성가족정책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명 : 성평등 정책추진을 위한 통합체계 마련

□ 필요성 및 배경

○ 필요성

- 사회의 성평등은 민주사회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토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개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성평등이라는 가치뿐만 아니라 정책의 현실성과 정책효과를 높이는 결과로 돌아옴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우리 시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여성, 아동·노인·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정책을 복지여성국 내 여성정책과에서 전담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관련 정책이 성주류화 전략 관점에서 수립된 ‘성평등 정책’이 아닌 시혜적인 차원에서의 복지, 돌봄에 국한되어 기획·실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여 기획·실행하는 전담 부서 및 인력이 부재함 (근거: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조 1항)
- 현재 성평등 전문관이 임용되어 있으나 인력이 1명뿐이고 그나마도 6급이라는 직급과 계약직이라는 지위로 인하여 수원시정 전반에 성평등관점을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기존 성평등정책파트너 등 거버넌스 체계가 참여라는 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참여자들의 역량강화 및 업무 전문성 제고 등에서 한계를 보임

□ 사업목적

- 과거 우리 시는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비전으로 내세워 여성친화도시를 인증 받았으나, 지금까지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들을 여성정책과만의 한정된 영역으로 축소해왔음
- 새로운 수원특례시의 출발선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성주류화 전략을 채택하여 성평등한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성평등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성평등한 수원특례시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함

□ 사업내용 (제안내용)

○ 성주류화 전략 전담 성평등기구 설치

- 시장 직속의 성평등 기구를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 부서장 중 1인 담당(젠더 전문가 또는 성인지감수성 확인된 인력)
- 모든 부처의 정책을 성주류화 전략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검토 및 조정하는 업무
- 필요시 모든 부처와 TF구성 및 협조요청 가능한 위상 필요

○ 여성정책과 권한 확대 및 인력 현실화

- 여성정책과를 특수업무분야 또는 이에 준하는 분야로 인정하고 권한과 위상 확대
- 전공자 및 근무경력 확인 후 인력 충원, 순환보직에서 제외할 것
(이에 따른 인사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체계 정비)
- 성평등 전문관 및 담당직 직위 상향 조정 필요

○ 관련분야 개인 및 단체와의 관계를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거버넌스체계를 수립

- 여성 및 젠더 관련 위탁기관, 시민사회단체, 지역 내 전문가 그룹 등이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구성하고, 관과 시민 사이의 협력 및 소통체계를 구성
- 시의 주요 정책 등 평가 및 환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연도별 추진내용 : 성과지표 해당 없음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성평등기구 설치 -여성정책과 권한 강화 및 인력 충원 - 젠더거버넌스 수립 추진	-성평등기구 설치 -여성정책과 권한 강화 및 인력 충원 - 젠더거버넌스 수립 추진	-성평등기구 설치 -여성정책과 권한 강화 및 인력 충원 - 젠더거버넌스 수립 추진	-성평등기구 설치 -여성정책과 권한 강화 및 인력 충원 - 젠더거버넌스 수립 추진

② 사업명 : 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강화

□ 필요성 및 배경

-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은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정책 및 의사결정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임.
- 수원시 5급이상 여성공무원 현황(21.12.31.인적자원과)에 의하면, 수원특례시의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19.5%로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20.8% 및 경기도 20.9%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공무원 조직이나 공공기관에서 관리직 여성이 적은 것은 그 동안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를 비롯하여 여성의 출산 및 자녀양육 등에 의한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고위직에 발탁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임

□ 사업목적

- 정책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성 차별적인 영향을 해소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가 필수적임
- 2022년 수원시는 특례시로 출범하였고, 민선7기 시정의 성평등도시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가 바로 공직사회의 성평등 실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직에 여성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

□ 사업내용 (제안내용)

- 관리직 승진공무원의 성평등성 반영
 - 관리직 승진 예상자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할당제 도입
- 조직의 주요 부서에 성평등성 반영
 - 예산재정과, 인적자원과, 기획정책과 등 주요 부서의 성별 형평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 수원시 공공기관 관리직의 성평등성 반영
 - 도시공사 및 재단 등의 경우 2023년까지 관리직 관리계획 수립
 - 공공기관 관리직 여성 비율관리직 관리계획 수립우리시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 수원시 관리직 여성 비율 연도별 목표제 도입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 23%	목표 25%	목표 27%	목표 30%

③ 사업명 : 수원시의회 성평등 수준 제고 방안

□ 필요성 및 배경

○ 필요성

- 입법단계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성차별적 내용이 조례나 규칙 등에 입법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평등한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회의 성평등 수준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수원시의회의 의장단(의장, 부의장, 각 위원장 등)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의장단 7명 중에서 복지위원장만 여성의원이며 나머지는 모두 남성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수원특례시의회에서는 의장단을 구성할 때 여성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대상 성평등 인식 제고 방안이 필요함
- 2022년 지방선에서 여성 당선인은 전체 37명 중에서 14명으로 37.8%를 차지함

□ 사업목적

- 수원특례시 의회의 지방의회의 성평등 실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해결방안 마련 및 성평등(젠더)지수 확대 개선 목적

□ 사업내용 (제안내용)

- 대 상 : 수원시의회 의원 37명
- 방 법 : 의원연구단체의 성별 균형 참여 관리 추진, 성평등 관련 교육 시간 지원
- 세부내용
 - 정책연구용역을 위한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 참여비율의 관리 추진 (개별 연구단체 구성 중 특정 성별의 참여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추진)
 - 정책개발에 대한 양성 평등 참여 확대로 성평등 지수 확대 개선
 - 정책연구에 이은 향후 입법 과정의 성인지적 관점 확대
 - 성평등한 정책 추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과제 확보 노력

- 수원시의회 성평등 교육 등 학습 활동 지원(젠더기반폭력예방교육, 성평등교육, 성인지 정책교육 등) 정례화(의무화)
- 관련부서 :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 연도별 추진내용(연도별 성평등 교육 횟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간 1회	연간 2회	분기별 1회	분기별 1회

4 사업명 : 수원형 성평등지수 관리체계 구축

□ 필요성 및 배경

○ 필요성

-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국가 성평등지수를, 그리고 2011년부터 지역(광역시) 성평등지수를 생산 발표하고 있지만,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등의 성평등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원형’ 성평등지수 생산 및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성평등지수란 남성과 여성의 격차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사회문화, 정치경제, 복지 및 폭력 등 여러 영역에서 성별 불평등을 측정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생산하기 때문에 수원특례시의 성평등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성평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가족분과에서는 2020년부터 ‘수원형’ 성평등지수 개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2020년부터 시작된 국가 성평등지수 개편에 맞추어 2020년 ‘수원형’ 성평등지수를 개발하였고, 2021년 기존 성평등지수를 보완하여 2020년 기준 수원형 성평등지수 값을 자체 생산하여 발표함(2017년 60.9점에서 2020년 67.4점으로 개선되었음)
- 2022년 여성가족분과는 수원형 성평등지수에 대한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

나 재정이나 인력 등의 한계가 있는바 향후 수원형 성평등지수가 지속 생산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사업목적**

- 수원시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는 수원의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뿐 아니라 성평등도시 발전 모색
- 수원형 성평등지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 **사업내용 (제안내용)**

- 대 상 : 수원형 성평등지수 관련 사업 및 정책
- 방 법 : 수원형 성평등지수 관련 통계 생산 및
- 세부내용
 - 2022년 수원형 성평등지수 생산 및 관리(2021년 생산 자료 분석)
 - 2020년 수원형 성평등지수 67.4와 2021년 지수의 전체 및 영역별 비교
 - 수원형 성평등지수 추세(2017~2021)를 바탕으로 향후 수원특례시의 성평등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도출

○ 연도별 추진내용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성평등지수 지속 생산 및 관리	성평등지수 지속생산 및 관리	성평등지수 지속 생산 및 관리	성평등지수 지속 생산 및 관리

※ **수원형 성평등 관리체계 구축방안**

1) 제1안 :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간 사업으로 채택하여 추진

- 첫째, 시정연구원은 수원형 성평등지수 생산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갖추고 있을 뿐만 성평등지수 관련 자료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갖고 있음.
- 둘째, 연구원은 매년 생산되는 수원형 성평등지수를 보관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음.

- 셋째, 시정연구원은 매년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의 지속사업으로 매년 채택하여 수원특례시의 성평지수를 생산하여 발표하는 등 연례 사업으로 추진

2) 제2안 :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받은 여성단체(선정)에게 위탁 추진

- 첫째, 수원지역 여성단체 및 여성지도자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여성단체에게 매년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위탁 추진
- 둘째, 인천의 경우 여성단체(구 여성의전화)가 매년 인천시 기초단체별 성평등지수를 생산하여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듯이 수원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추진

⑤ 사업명 : 수원형 여성 경력이음 및 경력단절예방 지원정책 수립

□ 필요성 및 배경

○ 필요성

- 2022년 5월 31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단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으로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6월 8일부터 개정안 본격 시행
- 여성일자리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법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의 책무가 강화될 예정임
- 일, 가정, 문화를 양립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최소화, 경력 단절 사전 예방이 중요한 과제임
- 여성들이 경력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여성일자리에 있어서 경력단절여성만이 주요 대상으로 일자리, 취, 창업, 교육 지원서비스가 진행되어 왔음.
-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확대됨으로 인하여 여성의 직업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임
-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를 경력단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법 개정을 통하여 경력단절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경력이음에 대한 책무 강화 정책이 예상됨
- 현재 정책적으로 경력이음,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뚜렷한 정책과 방안이 부재하며 연구 중인 사항임

■ 문제점

- 현재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법 체계 하에서 주로 여성일자리 지원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 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경력단절

여성지원센터) 경우 경력단절여성을 주요 대상층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음

-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는 경력보유여성으로 대체될 예정임
- 새로일하기센터 대부분의 기관에 현재 경력단절예방지원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나, 수원시는 특례시임에도 경력단절예방지원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수원시 알하는 여성 대상의 전문적 수행사업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떨어짐
- 경력이음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내용이 미약한 상황임

□ 사업목적

- 경력유지, 경력단절예방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전문 서비스 제공
- 일 가정 양립 문화 촉진하여 경력단절 사전 예방
-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하여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경제적 성평등 사회 구현

□ 사업내용 (제안내용)

- 대 상 : 경력보유 여성 및 일하는 여성
- 방 법 :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정부, 도, 시비 매칭사업)
- 세부내용
 - 새일센터에 경력이음 및 경력단절예방 전담인력 배치
 -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및 적용
 - 수원형 경력이음 및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연구용역
 - 성평등임금고시제 준비 및 시행
- 연도별 추진내용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새일센터 2곳 경력단절예방 지원 인력 배치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개발 및 상담지원	수원형 여성경력단절예방 정책 연구용역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모사업체 대상 사업주 인식개선사업	여성일자리 고용연계 기관 '인력 배치 또는 서비스 지원 예산 확대 성평등임금고시제 준비	성평등임금고시제 시행

⑥ 사업명 : 수원특례시 돌봄공공성 확대 _돌봄플러스센터(가제) 설치

□ 필요성 및 배경

○ 필요성

- 최근 ‘돌봄’은 가족관계를 넘어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리로서 윤리적, 도덕적 지향점으로 논의되기도 하는데 최근에서는 사회정책 차원에서 돌봄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복지국가의 역할을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 가족 변동의 다양한 징후와 함께 인구구조의 변동이 위기적인 상황으로 더 크게 다가오면서 우리사회에서는 그동안 전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해왔던 돌봄기능을 사회적 분담을 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어 왔으며 현재 생애주기별 가족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내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음. 이러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원시만의 다양한 돌봄정책에 대한 관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감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어왔고 그 대응책으로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돌봄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책들은 각각의 영역내에서 확장되어 정책목표와 지향점 등이 혼재되어 생애주기별 다양한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정책’으로서의 지향점이 부재하였음.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원시만의 돌봄정책 관련 전달체계가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통합 돌봄센터를 설립하게 될 경우, 생애주기별 가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대상이 해당됨에 따라 각 영역별 정부부처가 상이함. 이에 원활한 통합적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함.

□ 사업목적

- 다양한 가족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지방분권적이며, 지역주민에게 유연하게 다가가는 정책의 효율성을 가진 전달체계

- 를 구축하여 수원시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지역사회 자원 및 지역 내 돌봄서비스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 돌봄정책 전달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사업내용 (제안내용)

- 대 상 :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전 생애주기별 가족
- 세부내용 :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전 생애주기별 가족을 대상으로 수원시의 통합적 돌봄서비스 관리가 가능한 허브 기능 수행 (수원시의 모든 돌봄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모니터링 및 평가, 정책이나 서비스를 잘 관리하고 추진방향을 제시)

○ 연도별 추진내용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센터 설립을 위한 추진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검토, 수요조사 동반	센터 설립을 위한 추진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검토, 수요조사 동반	센터 설립을 위한 전반 계획 수립, TF팀 구성	센터 설립 추진

7] 사업명 : 수원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 필요성 및 배경

○ 필요성

-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면서 돌봄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으며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돌봄은 멈출 수 없으며 돌봄 없이 사람은 생존할 수 없음을 확인함. 양질의 돌봄은 안정적 노동자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해서는 돌봄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함.
- 돌봄 노동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대변되는 열악한 일자리로 굳어가고 있다. 공적 돌봄제도가 확대된 이후 돌봄 일자리가 증가하고 임금도 소폭 상승했으나 성별, 연령에 따라 위계화된 돌봄노동의 배치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돌봄 노동자의 고용안정성과 임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지난 10여 년 사이 돌봄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은 늘고 중고령자 비중도 크게 증가했으나 이런 경향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돌봄 직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고용 불안정성도 마찬가지로 더 높음.
- 지방정부는 돌봄노동자에게 월급제 도입, 안정적 고용,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등을 통해 양질의 돌봄을 만들어가야 함. 현재 돌봄노동자들은 이용자들의 갑질과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 및 노동자 교육 추진체계 마련도 시급한 상황임.
- 돌봄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부분은 매우 중요함. 지자체 자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을시 현장에서 숙련된 돌봄노동자들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안에서의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부양과 돌봄 등의 책임 모두를 가족에게 전가해온 우리사회의 제도적 가족주의가 지속될 우려가 있으며 가족문제 또한 지속 발생할 수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여성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0.0%, 57.8%, OECD 37개국 중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로 37개국 중 33위였으

며, 고용율은 57.8%로 31위를 나타남.

- 특히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0대까지 증가하다 30대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며, 15세 미만 자녀를 둔 한국 여성은 G5 국가 여성보다 취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은 65.0%가 육아, 가사 부담을 꼽았음. 수원시가 확대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영유아 인원에 비해 확대폭이 적어 지난해 기준 수원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7.8%로, 전국 평균 20.4%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남.
- 돌봄 노동은 여성이 가정에서 무급으로 하던 노동이었다는 이유로 노동의 가치를 저평가 받고 있음. 이 때문에 돌봄 노동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대변되는 열악한 일자리로 굳어가고 있음. 현재 사회서비스바우처 등 공공부문의 돌봄노동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매칭으로 이루어짐. 중앙정부가 정한 수가가 낮은 문제도 있지만 그 운영과 세부 예산지급은 지자체의 권한임. 현재 돌봄노동은 쪼개기로 시간제 노동을 늘려가고 있는 현실임. 지역 내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돌봄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할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함. 양질의 돌봄은 안정적 노동자로부터 시작됨. 지방정부는 돌봄노동자에게 월급제 도입, 안정적 고용,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등을 통해 양질의 돌봄을 만들어가야 함. 아울러 돌봄노동자들은 이용자들의 갑질과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음. 서비스 이용자 및 노동자 교육 추진체계 마련도 시급함.

□ 사업목적

-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면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돌봄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음. 이를 위한 돌봄 공공성 강화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 요구이며 지방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 양질의 돌봄은 안정적 노동자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해서는 돌봄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함.

□ 사업내용 (제안내용)

- 대 상 :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 돌봄노동자
- 방 법 : 돌봄노동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복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처우개선 방안 수립
- 세부내용 :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
 - 돌봄노동자의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행관리 감독
(ex: 수원시 생활임금 기준)
 -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실시(종사자 근로조건 중심)
 - 돌봄노동자 의료지원(감염병 예방을 위한 무료 예방접종 의무 지원 등)

○ 연도별 추진내용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처우개선 방안 계획 수립 및 추진 TF팀 구성	처우개선 방안 계획 최종점검 가이드라인 제작	처우개선 방안 수립에 따른 시범운영

⑧ 사업명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예비부모교육)

□ 필요성 및 배경

○ 필요성

- 제 20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롭게 출범한 현 정부에서는 출산준비 부터 산후 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을 강조한 임신출산 정책추진을 예고함.
- OECD회원국 중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2021년 기준 0.81명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1970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수치로 기록되고 있는데 올해에는 합계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발전에 있어서 초석이 될 수 있기에 중요함. 이처럼 건강한 가족 형성의 입문인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클 것임.
- 예비부모 교육은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의미의 교육이며, 미래의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긍정적인 자녀양육 가치관과 평등한 가족역할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예비부모교육이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점차 핵가족화 되는 가족의 형태 변화에 따라 가정에서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지고 부모로서의 역할과 아동발달, 자녀양육, 가족관계 등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의 역할과 아동발달 및 자녀양육방법, 가족관계, 의사소통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됨.
- 이런 상황들은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을 가중시켜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결여, 일관성없는 양육태도를 가져올 수 있고 심지어 자녀를 학대하는 등 왜곡된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이에 부모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함.

□ 사업목적

- 예비부모 교육을 통해 결혼과 출생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간극을 축소
- 올바른 부모됨의 준비와 부모의 양육효능감 증진을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전제조건 충족을 위한 가치관 이해 및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부모됨의 긍정적 의미 탐색 지원

□ 사업내용 (제안내용)

- 대 상 : 수원시 거주 25-45세 미만, 5년 이내 출산계획이 있는 예비부모교육 참여 희망자
- 방 법 : 21년도 세부사업중의 하나인 생애주기별 교육의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한 예비부모로서의 긍정적 가치관 정립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및 체험 지원 (회기별 2시간 3회기 이상 실시 예정)
- 세부내용
 - 민관협력 사항
 - : 예비부모교육 계획 및 추진전략 민·관 공동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
 - : 핵심업무수행이 가능한 거점기관 선정 및 역할부여
(지역 내 예비부모교육 추진기관 특성에 맞는 매뉴얼 개발, 공통강사 선발, 추진팀 실무회의 추진 등 기관네트워크 협력을 위한 역할)
- 연도별 추진내용

2022년 /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2년 사업추진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검토, 수요조사 동반	사업추진 (초기단계) 시범사업 실시	사업추진 (성장기)	사업추진 (안정기)
2023년 사업전반 계획수립, TF팀 구성	↓ 60명 (3회기*회기당10커플)	↓ 120명 (3회기*회기당10커플) *2회(상·하반기)	↓ 180명 (3회기*회기당15커플) *2회(상·하반기)

9] 사업명 :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 필요성 및 배경

○ 필요성

- 2019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9,940건으로 하루 평균 55명꼴이다. 재범률은 무려 78%에 달한다.¹⁾ 이런 현실에서도 데이트폭력 처벌법과 보호법이 없어, 데이트폭력피해 특수성에 따른 피해지원을 할 수 없음.
- 데이트폭력 유형 중 스토킹은 2021년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피해자가 고통을 받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많음.²⁾
- 2022년 4월 22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음.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 피해 전 단계인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 가족도 피해자로 지원하는 것, 스토킹 피해자 법률·주거·자립 지원 및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음. 하지만 여전히 처벌법이 갖는 한계로 인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미흡함. 이로써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 보호 및 지원체계가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2015년 실시한 수원시 여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평가에서 여성권익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피해 등 여성폭력 피해자 중심의 정책 및 제도 활성화 필요를 제안하였음.
- 2019년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사업 추진을 위해 수원시정연구원이 위 제안내용을 수렴하여 한정된 예산에서 지역 내 여성폭력 피해지원 기관의 도움으로(FGI진행) 「수원시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방안 : 데이트폭력을 중심으로」의 제목으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보고하였음.
- 같은 해,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는 「데이트폭력 아카이빙 기록하고, 기억하다」집담회를 개최하여, 지난 10년간 데이트폭력피해 지원 내용을 분석하여 보고함. 여성폭력의 발생 원인은 왜곡된 통념과 사회적

1) 2021년 7월. 수원여성의전화 수요논평

2) 2021년 5월. 수원여성의전화 수요논평

인식, 낮은 인권의식과 이에 기초한 관습과 문화, 미약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체계가 미흡한 것에 기인함.

- 대한민국에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법, 가해자 처벌법이 없어서 많은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인권보장,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마련이 필요함. 수원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가 있으나, 스토킹 범죄 특성상 데이트폭력에 수반된 스토킹범죄 특수성을 고려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특수성과 메커니즘
-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여성폭력 실태
- 2020년 수원 관내 스토킹 범죄의 신고접수 55건 중 8건 사건처리, 2021년 스토킹 범죄의 신고접수 191건 중 64건 사건처리(2020년 대비 2021년 신고접수 247% 증가, 사건처리 700% 증가)
- 2020년 수원 관내 데이트폭력 신고접수 625건 중 89건 사건처리, 2021년 데이트폭력 신고접수 843건 중 246건 사건처리(2020년 대비 2021년 신고접수 34% 증가, 176% 증가)
- 스토킹 범죄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 없음, 의료비 없음, 법률구조지원비 없음. 예산 확보 필요. 여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 스토킹처벌법 시행(2021.10.21.)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및 지원대책 마련 필요
-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1.09.28.)에 따른 적극적 피해지원 필요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제도적 실효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필요

□ 사업목적(제안내용)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지원제도 마련
 - 2021년 스토킹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 마련
 -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료비, 법률지원비 등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

○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 2019년 수원시 여성폭력실태조사(데이트폭력을 중심으로)를 바탕으로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 및 지원제도 마련

10 사업명 :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 필요성 및 배경

○ 필요성

- 2021년 4월 20일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제정됨. 법 제정 활동 22년 만이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법이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은 상태고, 스토킹 범죄와 가정폭력(친족 성폭력)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집을 나와 가해자의 추적을 피해서 생존해야 한다. 때문에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가 절실하다.

○ 현황 및 문제점

- 여성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수성을 갖는다. 가정폭력, 친족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와 사회관계망을 공유하면서 생명과 생활의 안전을 위협받는 처지에 놓인다. 현행법이 가해자의 인신을 구속하지 않고, 피해자의 위험 인지 시 지원하는 위험한 방식을 택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을 피해 사회관계망을 끊고 살아야 하는 억울하고 고통스런 삶을 살아야 한다. 가해자의 추적을 피해 직업조차 제대로 가질 수 없는 상황은 생활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활고까지 겹친 억울한 여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자립지원은 피해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사업목적(제안내용)

-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조례 등, 여성인권 보장을 위한 수원시 조례를 확장하여 피해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수원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11 사업명 :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확보

□ 필요성 및 배경

○ 필요성

- 2020년은 디지털 성폭력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이 사건처리는 2021년 하반기가 되도록 사그라들지 않았다. 날로 늘어나는 여성폭력 유형의 다양성은 흉악성으로 이어지면서 ‘나도 피해자인지 몰라’의 공포에 시달리며 긴장과 피로 속에 여성들이 살고 있다. 특히나 1인 가구 시대에 여성단독가구, 범죄 취약 가구 등을 위한 범죄 대응 시스템으로 안전장치를 지원하여 범죄에 잘 대처하고, 신고자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여 경찰 출동하는 서비스로, 현재 인계동, 우만동 거주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수원시민의 일상생활에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성범죄에 보다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 수만큼,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여성 대상 주거침입 범죄는 2016년 6,043건에서 2020년 9,751건으로 약 3,000건 이상 증가했다.
- 여성 1인 가구 수는 2020년 기준 333만 9,000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50.3%이며 20·30대 여성 1인 가구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20년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도는 여성이 27.6%, 남성은 36.0%로, 범죄 안전 항목의 경우 매우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답한 여성은 21.6%, 남성은 32.1%로 조사됐다. 즉, 안전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범죄 발생 시,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치 지원으로 예방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 사업목적(제안내용)

○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 사업’은 노후 된 원룸,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지리적, 환경적으로 놓여있는 소액 전·월세 여성 1인가구(한부모가족, 범죄피해여성 1인 가구 포함)에 안전장치를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 스마트 초인종
- 문 열림 감지 센서
- 창문 잠금장치
-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 안심벨 서비스

12 사업명 : 인식개선 활동 활성화

□ 필요성 및 배경

○ 필요성

- 2020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30,105건, 인구 10만명당 58.1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강력범죄(흉악)중 살인, 강도, 방화범죄 발생비는 지난 10대비 감소 반면, 성폭력 범죄 발생비는 약 1.3배 증가하였다.
- 최근 성폭력범죄의 급격한 증가는 강간등 상해/치사 등과 같은 유형의 범죄보다는 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가 늘고 있다.³⁾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더불어 피해에 따른 신고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2021년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367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불법촬영, 유포 및 재유포, 유포불안, 온라인 그루밍,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몸캠피싱, 불법합성 및 도용, 기타는 777건이었다.

3) 대검찰청. 2021 범죄분석, 성폭력범죄 pp. 13~16.

□ 사업목적(제안내용)

- 젠더폭력예방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는 제반사항 마련 및 지원
 - 인식개선 캠페인(5, 9, 11월)
 - 젠더폭력 예방교육
 - 시민참여 불법촬영 감시단(수원서부경찰서 ‘1시간의 기적’)확장

[지정토론]

1. 노동 소득 제안에 대한 토론
2. 성평등정책 제안에 대한 토론
3. 폭력안전 제안에 대한 토론
4. 추진체계 및 젠더거버넌스 토론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노동, 소득] 제안 과제에 대한 토론

최윤선(가톨릭대학교 연구교수)

2022년 현재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과제와 민선8기 성평등정책 발굴을 위한 토론회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성 노동 관련한 과제로 제안된 ‘수원형 여성 경력이음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정책 수립’ 과제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제 제안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 5월 31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단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으로 개정되어 6월 8일부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은 그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경력단절예방이라는 정책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성차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새롭게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여성부나 성평등 관련 과제는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여가부, 법무부, 농식품부)’과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복지부)’에 불과하며,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50번 과제에 포함된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성별근로 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본 조성’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 정부까지는 ‘성별임금 공시제’로 표현되어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성별근로 공시제’라는 용어로 변경된 채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어든 우리사회 노동시장의 성별격차를 보여주는 결과지표인 성별임금 격차는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성평등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비록 용어를 달리하고 있지만 ‘성별근로 공시제’는 포함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기존의 성평등정책 전반이 크게 약화 될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오히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성평등정책을 강화하고,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정책 중 중요한 정책을 유지하고, 한편으로 보다 혁신적인 정책과 사업을 도입해 추진해야 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새롭게 들어서는 민선8기 수원특례시의 여성노동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선, 그간의 성평등 노동정책과 사업이 중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중앙정부에서 약화되거나 폐기된 정책과 사업을 수원시 자체적으로라도 포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친화도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 성평등임금공시제, 일생활균형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적극적으로 용개선조치 지원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과 사업이 정책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 수원시 성평등 정책으로 추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기존의 정책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성평등한 고용노동정책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여성고용노동정책을 일부라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분과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포함한 정책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경제로 전환은 기존 노동시장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불평등한 성별 노동시장 구조는 여전히 지속되거나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여성분과에서는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교육훈련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공계 여성 전공자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관련 분야 진출을 위한 모집단 자체가 부족하고, 중숙련 이상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의 특성상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일자리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은 시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숙련 수준까지 경력을 이어가기 어려

운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때문에 이공계 분야 전공자나 재직자가 겪고 있는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본 제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돌봄노동의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는 기업유치를 통해 발생하는 일자리를 제외하면, 대부분 돌봄일자리라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다수의 돌봄노동자는 여성입니다. 결국 성별임금격차 해소 전략은 여성들이 숙련수준이나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이미 다수의 여성이 진입해 있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돌봄일자리 확대하고, 그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지방정부의 매우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여성노동정책의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중이 높은 여성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가 있었고, 그것이 성별 임금 격차를 일부나마 줄이는 효과를 발휘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원시 자체 생활임금제나 돌봄노동자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 보전이나 임금 보전성 정책을 통해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제고와 성별임금격차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모든 사람이 일하고, 돌보고, 쉴 수 있는 기본적 여건 구축을 위한 핵심 지표’를 설정하고, 관련 예산과 정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2019년 경기도 주최 토론회에서 제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국 일하는 여성이 가족돌봄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매우 중요한 것은 모든 시민의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일, 돌봄, 휴식이 가능한 최저 수준을 설정하고, 모든 시민이 그러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간 여성은 생애 전 과정에 걸쳐 경제적 보상 없는 돌봄 노동으로 일할 기회를 상실해왔고, 남성은 삶의 필요 조건인 돌봄을 배우지 못하고 행복한 삶의 중요한 가치인 가족과의 시간이나 자녀 돌봄 시간을 희생하며 경제활동에 매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삶의 질이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시정 전반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5기 수원특례시 지역사회보장계획 과제 발굴 및 민선8기 성평등정책 제안에 대한 토론

김혜금(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교수)

성평등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저(基底) 가치이며, 저출산·고령화 &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포용국가를 향해 나아가는데 있어 주요 지표가 됩니다. 성평등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평등할수록 소득수준과 소득분배, 가족건강에 긍정적이며, 성평등은 기업 생산성 향상과 이윤 증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연구결과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 및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에 발표자께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 다양하고 독창적인 여성가족정책을 제안하신 바, 12가지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평등 정책추진을 위한 통합체계 마련

성평등기구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제안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성평등 기구에서 하는 일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평등기구를 별도로 제안하는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2. 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강화

관리직 승진 예정자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할당제 도입을 주장하셨는데 이러한 측면이 오히려 성평등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며, 보다 면밀한 승진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역량 중심으로 승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3. 수원시의회 성평등 수준 제고 방안

2022년 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인이 전체 37명 중 14명으로 37.8%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별 할당제를 통한 수원시의회 의장단 구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개별 연구단체 구성 중 특정 성별의 참여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안에 동의합니다.

4. 수원형 성평등지수 관리체계 구축

수원특례시의 성평등 수준을 진단하는 작업에 많은 인력과 재원이 필요하므로 관리체계를 보다 분명하게 구축하여 수원시의 성평등 정도를 파악하여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별도의 관리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수원형 성평등 관리체계 구축방안 1, 2안과 같이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재정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수원형 여성 경력이음 및 경력단절예방 지원정책 수립

경력유지, 경력단절예방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전문 서비스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를 촉진하고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는 매우 좋으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력을 지녔는지 그리고 그 경력을 살려서 지속할 수 있을지 맞춤형 지원이 제공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경력보유 여성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예방 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사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력이 단절된 혹은 경력이 중간에 끊긴 이유를 알아내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사업이 진행된다면 보다 시너지 효과가 클 것입니다.

6. 수원특례시 돌봄공공성 확대_돌봄플러스센터(가제) 설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원시만의 다양한 돌봄정책에 대한 관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대상별 돌봄의 필요성과 내용이 다른데 통합관리기구에서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대상을 특화해서 돌봄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통합돌봄플러스센터를 설치했을 때의 부작용이나 어려움이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 수원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돌봄노동자의 정확한 정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대상을 돌보는 노동자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들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이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8.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예비부모교육)

부모교육 대상자를 모으기가 쉽지 않고 커플이 3회기를 참석하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3회차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부모교육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요즘 가정양육 수당을 받는 부모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통해 건강하게 영유아가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청소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인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을 지원하는 등으로 부모교육 대상을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9.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10.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를 위한 의료적, 법률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여성권익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여성 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으로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11.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확보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 사업은 매우 현실적이며 필요한 정책입니다. 소액 전·월세 여성 1인가구에 안전장치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정책 제안이라고 사료됩니다.

12. 인식 개선 활동 활성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젠더폭력 예방교육, 시민참여 불법촬영 감시단 제안은 실현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기 수원특례시 지역사회보장계획 과제 발굴 및 민선8기 성평등정책 제안에 대한 토론, 폭력안전 토론문

김성미경((사)한국여성인권플러스 대표)

1. 수원시 현황

- 총 인구수 2020년 1,221,913명⁴⁾
- 2018년부터 인구유입 및 증가 둔화
- 성비 남성 50.4%, 여성 49.6%로 경기도 평균보다 0.1% 여성이 적음.
- 영통구의 여성거주 비율은 권선구보다 0.4p 높음
- 여성 1인 가구는 42.6%임.
- 수원시 등록 외국인 2021년 기준 29,708명(여성 14,826명 49.9%, 이 중 팔달구에 38.8% 거주)⁵⁾
- 수원시 여성시설: 공개시설들은 주로 팔달구와 영통구에 분포되어 있음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수원여성문화공간 휴, 한부모가족시설, 모자일시보호, 미혼모 지원시설
- 수원시 복지여성국 현황
여성정책과 총 인원 17명 중 여성정책팀 5명, 여성친화팀 5명, 건강가정팀 6명으로 여성폭력지원시설관련 업무는 주로 건강가정팀 담당⁶⁾.

2. 안전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 변화

- 2016년 강남역 10번 출구사건, 각계 각층의 미투운동, N번방 성착취 범죄에 대한 대응 등은 우리사회에 성평등 정책의 이슈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또한 자유와 평등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각성한 청년층의 불공정, 차별에 대한 민감성은 더욱 높아져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가 증가함.

4) 참고자료)2021년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

5) 통계청 자료

6) 수원시청 홈페이지 참조

- 안전에 대한 여성들의 불편함과 이에 대한 해결 요구도 매우 높음. 2021 범죄 피해자 통계를 보면 전체 범죄피해자에서 여성의 비율은 28.9%이지만 강간, 강제추행 등 여성폭력 관련 범죄는 각각 97.6%, 90.2%로 절대적으로 여성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음.
- 치안데이터를 활용한 2022년 치안변화 분석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폭력, 방화, 강간 강제추행 범죄 소폭 감소하는 반면 보이스 피싱과 아동학대, 선거 사범은 증가하였음. 또한 여성 대상 범죄와 강도 및 마약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그리고 가정폭력은 연도별 신고량이 비슷하게 나타남(2019년~3년간 평균 232,728건).⁷⁾
- 1인 가구 증가, 특히 20대와 70대 이상의 여성 1인 가구 증가는 성별, 연령별, 거주환경별 특성에 따라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여성폭력과 안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여성 대상 범죄와 폭력을 방치한다면 다방면에서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제약하여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함. 따라서 여성에 대한 다양한 범죄의 증가, 특히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스토킹 범죄 등에 시행규칙 보완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 현재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대책을 진단하고 지역사회 시스템을 촘촘히 구성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할 것임. 또한 피해자를 격리하고 피신시키는 방식으로부터 가해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변화해가는 시민의식에 반해서 정부 기관에서는 여성들의 정치, 정책적 참여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기에 지역 여성들의 정책 참여활동에 기반하여 성평등한 도시, 안전한 도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 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적극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수원시의 적극적 조치들이 필요함.

7)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3. 여성가족분과에서 발굴한 여성가족정책 제안에 대한 제언_폭력과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1) 제안 내용

- 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확보
- 인식개선 활동 활성화

2) 제언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진단과 조례 및 시행규칙 재개정 필요

- 기존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 체계 진단 및 새로운 범죄유형의 피해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여성폭력 피해 회복” TF구성 제안, 통합적 진단과 개선안 마련해야 함. 이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현장단체들과 논의구조를 상설화 함.
- 이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 법(여성폭력방지법등), 여성 대상 범죄 피해자 지원 및 예방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재 개정을 수원시 의회에 요구
- 조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마련해야 함. 논의단위에서부터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진행되어야 함. 이 논의는 민과 민, 민과 관, 그리고 관과 관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민과 관의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강화 필요.

□ 지역자치경찰과의 협력방안 마련

- 수원시 구도심을 중심으로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마련 예를 들면 수원시 구도심 개발과 관련한 모든 사업이 인권과 성평등 관점을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 후 승인받도록 시스템화 필요
- 범죄예방환경을 만들기 위한 셉티드 설계를 구도심, 골목길 등에 적극 도입 및 지속관리 모니터링
- 지역자치경찰제도와 지역 치안공동체(주민 커뮤니티 순찰대) 협력 단위를 적극 구성하여 시민인식개선 활성화 활동, 귀갓길, 골목길 치안유지 활동 등 실질적인 치안유지에 도움이 되는 상설화된 시민조직 양성 및 모니터링
- 야간 도로변 불법주차 및 거치물 모니터링

- 여성대상 폭력 가해자의 형사처리 과정에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방식 연구 필요. 특히 스토킹이나 접근금지 명령의 실질적인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구치 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병과 검토.

3)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해결과제

□ 성평등 정책추진 주체인 행정의 역량강화

- 수원 특례시 뿐 아니라 광역시조차도 기초자치단체로 갈수록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도, 전담공무원도 찾아보기 어려움. 또한 여러 종류 업무의 과중함과 공무원 순환보직 정책은 성평등 정책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 따라서 모든 부서에 대한 성평등정책 추진 권한을 가진 전담기구 및 전문가가 필요.

□ 민관 파트너십 강화

- 변화해가는 2-30대 여성들의 정치의식과 정책참여 의지는 재정과 정책, 두 힘을 가지고 있는 관의 민과의 협력 의지를 통해서 담아 내야 함. 그러나 현장을 기반한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시민, 민간단체들과 정책파트너로서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음. 이 지점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고민해 보아야 함.

□ 여성단체들의 정책파트너역량 약화

- 여성운동의 제도화 과정은 정부와의 정책 파트너 관계를 약화시켰고 행정의 하부기관 역할을 더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건강한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지자체 뿐 아니라 여성단체들에게 필요함.

□ 현 정부의 여성정책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 여부

- 수원특례시의 각 조례 및 시행규칙들을 점검하고 민선 8기 여성정책관련 시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함.

□ 기타 제도적 정비

- 그밖에 형식적인 예산 책정, 고위직 공무원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 부서 간 협업이 어려운 칸막이 행정 등의 문제 또한 장기적 해결 과제임.

여성가족정책 토론회 '추진체계 및 젠더 거버넌스' 토론문

이영안(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여성가족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

- 제1기~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여성가족정책은 '여성가족' 맞춤형 정책 제시
 - 여성가족 필요성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여성가족정책을 계획에 제시 및 추진
 - 여성가족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시
- 향후 추진방향
 - 기본방향 :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은 6대 영역(돌봄, 건강, 일자리, 안전, 문화·교육, 주거 환경)으로 구성
 - 여성가족정책은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6대 영역 맞춤형으로 제시 필요

□ 추진체계 및 젠더 거버넌스

- 성평등 정책추진을 위한 통합체계 마련
 -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여당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데, 여당은 "2001년 여성가족부가 처음 신설된 뒤 20년이 지난 지금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함
 - 그러나 아직도 성평등 사회가 구현되지 않았으므로, 수원시는 지속적인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통합체계 마련이 필요함
 - 세부사업 3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시장의 의지와 타 부서 및 시의 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세부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함
 - 따라서 '젠더 거버넌스 수립' → '성평등기구 설치' → '여성정책과 권한

강화 및 인력 충원' 순으로 연차별 제시 필요

- 다만, '여성정책과 권한 강화 및 인력 충원'은 단독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성평등기구 설치'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효과성과 실현성이 높아 보임

○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강화

- 수원시는 공공분야 여성 대표성이 타 지자체에 비해 취약하므로 여성 대표성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세부사업별 목표제 도입이 필요함
- 관리직 승진공무원의 성평등성 반영 : 20% → 22% → 24% →26%
- 조직의 주요 부서에 성평등성 반영
: 주요 부서(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인적자원과 등) 제시
- 수원시협업기관 관리직의 성평등성 반영
·수원시협업기관 13곳 : 공기업 1, 출자·출연기관 8곳, 보조기관 4곳
·협업기관의 구성원 수가 상이하여 모든 협업기관이 대상이 될 수 없음
·협업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현황 검토를 통한 대상 기관 선정 필요

구분	기관명
공기업	수원도시공사
출자·출연 기관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장학재단,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문화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에프씨, 수원도시재단
보조기관	수원시체육회, 수원시장장애인체육회,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원시의회 성평등 수준 제고 방안

- 수원시의회 성평등 교육은 적극 추진할 필요 있음
- 다만 현황 및 문제점은 의장단 성 비율이고, 사업은 성평등 교육 횟수이므로 결이 맞지 않음

○수원형 성평등지수 관리체계 구축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가족분과에서 수원형 성평등지수를 개발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관리체계가 필요함
- 수원시가 매년 성인지 통계를 작성하게 된다면 성평등지수도 함께 관리 하는 것을 검토 필요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여성가족 정책 토론회

발행일 : 2022. 6. 24.

발행처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곡방정로 194번길 19

전화 : 031) 898-9851~4

팩스 : 031) 248-1906

홈페이지 : <http://www.swwelfare.org/>